

의견서

1. 취지

- 최근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회원동의 없이 보험사에 불법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기업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거래한 시기가, 지난 2014년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온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다시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스팸전화, 스미싱 등의 피해가 근절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홈플러스(주) 임직원들은 “대부분의 경품행사는 개인정보 판매까지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기존의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삭제 관련

- 지난 3월 홈플러스는 회원들이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 관련하여 제3자 제공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홈플러스 회원은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